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법원 "도로여건 상 사고예견·회피 사실상 불가능"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79)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6일 뒤 기도폐색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도로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에 비춰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색과 기흉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수와 가로등이 가리는 구조"라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짧어진 구간에서 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속도가 70km인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이하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으로서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해도 시속 50km 이상의 속력과 앞뒤 차간 거리 20m 이하의 간격으로 진행하던 다수의 차량들을 뒤따르던 피고인으로서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고성 산불은 人災...한전 "신속 보상"

#### 경찰, 한전 과실로 종결...관계자 9명 검찰 송치 피해주민 "경찰이 한전 편 들어왔다" 의혹 제기

지난 4월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이 고압전선 노후화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 등 복합적인 하자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4월4일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 9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

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권의하기로 했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은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손 해금액이 확정

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며 "이달 11일 기준 선지급 보상금은 715명 123억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비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강릉 지역 안전보강형 전기공급방식 개발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통해 설비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경찰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전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조사 결과가 이미 밝혀진 것과 차이가 없다며 봐주기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장일기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 국

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발표한 것은 8개월 동안 감춘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불피해 보상을 문제 삼아 6차 협상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만큼 이 시점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의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협상에서 한전이 피해액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제시하는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한전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혁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상, 소송 등에 영향이 미칠 것이기에 검찰을 상대로 집회와 항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4일 오후 7시17분쯤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서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생긴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보수 등 업무상 실화에 무게를 두고 8개월 간 수사를 벌였다. 지난 4월과 8월에는 한전 속초·강릉지사와 한전 나주 본사, 강원본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민도 648가구 1490명에 이른다.



"화재가 났을때 소화기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광장에서 시민과 학생,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이 '소화기 사용법'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는 "겨울철 화재피해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휴·폐업 대형 유흥업소 재점검



#### 43건 불량사항 적발 14건 시정명령 내려

소방청은 최근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을 재점검해서 불법 용도변경,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청은 올 4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 이후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특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36개소는 휴·폐업한 상태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특별조사를 재실시하고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에 재차 확인을 거쳤다. 확인결과 36개 대상 중 4개소(11.1%)는 다시 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32개소(88.9%)는 휴업(12), 폐업(16), 철거(1), 대상처제의(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반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 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

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특히 영업 중인 4개소 모두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으며 소방분야 27건(62.7%), 건축분야 7건(16.4%), 전기분야 9건(20.9%) 등 총 43건이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객석유도등 미점등, SP설비 삽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및 미비치 등이었다.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상이 다르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해 휴게실, 사무실, 물품보관소사용, '전기분야'는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과대, 규격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설치와 유지관리,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